

국회 파행 타개, 탈출구 찾아라

한 “만나서 대화를” 민주 “사과부터 해야”

물밑접촉은 계속…원내대표 회담 가능성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국회 파행이 23일까지 6일째 계속되고 있지만 탈출구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대화’를 이야기하지만 ‘명분 쌓기’으로 해석될 뿐이다. 민주당은 ‘야법을 직권상정 처리 않겠다’는 전제 조건을 내세우며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선진당이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지만 성과는 전혀 없다.

때문에 이날도 국회 본회의장과 문방위·정무위·국토해양위·행자위 회의실 등에 대한 애당의 접거나는 계속되고 있으며 모든 상임위에서 법안심의는 중단돼 있다.

박희태 대표는 이날 “민주당과 대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오늘 안되면 내일 김형오 의원에게 직권중재에 나서겠다니까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모든 가용 채널을 동원, 민주당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성사’를 위한 노력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대화를 위해서는 애당의 주장을 귀를 기울여야 하지만 그런 태도는 전혀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법안 강행 처리를 위한 ‘명분 축적’ 용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박 대표는 이날 “최후까지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그래도 안될 때는 다수결에 의한 처리가 민주주의 기본”이라고 밝히 타협이 안 되면 강행처리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민주당의 태도는 결연하다. ‘야법 비(非)처리 선언’을 전제조건으로 내걸며 대화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악법이라고 주장하는 법은 금산분리 완화법, 마스크 착용 금지법(집시법), 신문 방송 경영 허용법, 휴대폰 도청법, 국정원법 개정안, 네

티즌 통제법(정보통신망법), 노인착취법(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민주당은 일단 광점법안에 대해 3개 법안에 대해 찬성, 6개 법안에 대해 조건부 찬성 입장을 정한 반면 16개 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당론을 정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MB 표 악법들을 일괄 강행 처리하겠다는 전쟁 종료시 한을 정해놓고 대화를 하겠다는 것은 의미 없는 위장이다. 그러나 금산분리 완화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불법집단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을 허용하는 법안, 사이버모욕죄 신설법안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특히 김형오 의원의 직권상정 방침에 대해서도 “국회법에도 없는 직권중재라는 표현을

쓰며 무조건 만나라는 게 말이 되냐”고 반발하고 있다. 오히려 김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한편, 자유선진당은 23일 한나라당이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공언하고 있는 25개 광점법안에 대해 3개 법안에 대해 찬성, 6개 법안에 대해 조건부 찬성 입장을 정한 반면 16개 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당론을 정했다.

선진당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은 복면도구 착용금지 조항 삭제, 방송법은 1인 지분 소유한도(49%)의 현행(30%) 유지, 신문법은 언론진흥재단의 입원 및 직무조항 조정을 전제로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산분리 완화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불법집단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을 허용하는 법안, 사이버모욕죄 신설법안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국회의원들 국회의장 공관 항의 방문

민주당 의원 10여명이 23일 오후 서울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을 찾아 김형오 국회의장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예산부수법안 직권상정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한편 직권중재 방침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국회의장 공관을 방문했다.

/연합뉴스

일단 민주당의 사과 요구에 직접 시인하는 형태가 아닌, 현 국회 파행사태에 대해 포괄적 유감을 표명하는 정도가 거른된다.

다만 민주당이 대화 전 사과를 요구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일단 대화를 시작하자고 맞서고 있어 접점을 찾을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움직임이 ‘중점 법안의 연내 처리’라는 목표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민주당과의 협상이 불발로 돌아갈 경우에 대비한 체비 갖추기에도 한참이다.

또한 한나라당은 전날 저녁과 이날 오전 6시까지 협상을 통해 협의 처리하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김형오 국회의장,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원내대표의 중재에도 적극 호응하는 모양새다.

문제는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사과 및 재발방지 책 요구에 대해 무엇을 내놓을지 여부다.

/연합뉴스

한 “野 끌어들일 카드 없어서…” 고심

민주당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이기 위한 한나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연말 임시국회에서의 100대 중점 법안 처리를 앞두고 애당에 막판 협상을 제안했지만 정작 민주당은 “대화 여지가 없다”며 높은 차단막을 쳐놓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내건 대화의 전제조건을 한나라당이 수용하면 여야 협상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한나라당으로선 이를 달라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다.

새해 예산안 및 한미 FTA 비준안과 관련한 원내전략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인 데다,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당의 요구를 우회적으로 피하면서도

각종 법안의 협의 처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물进出하고 있다.

우선 민주당은 향해 ‘대화하지’는 메시지를 잇따라 던지고 있는 것은 이같은 방안의 하나다.

박희태 대표는 23일 “민주당 정세균 대표에게 언제 어디서든 만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흥준표 원내대표도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 “마지막까지 협상을 통해 협의 처리하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김형오 국회의장,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원내대표의 중재에도 적극 호응하는 모양새다.

문제는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사과 및 재발방지 책 요구에 대해 무엇을 내놓을지 여부다.

/연합뉴스

민주당 野性 재점화

丁·元 ‘투톱’ 대여전선 진두지휘…‘강한 리더’ 면모 부각

선명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민주당의 ‘투톱’인 정세균 대표와 원혜영 원내대표가 확연히 달라졌다.

그동안의 우왕좌왕 행보를 후회라도 하듯 광점법안 입법부쟁과 정에서 초강성 모드로 대여전선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기회에 ‘강한 리더’의 면모를 부각하겠다는 각오다.

우선 ‘미스터 스미일’로 통하는 정 대표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진지 오래다. 그는 공식 회의석상마다 비장한 얼굴로 “악법에 깔려죽든, 저지하든 둘 중 하나”, “타협의 길은 없다”는 등의 강성 발언을 쏟아내며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여당의 대화 요청에 대해서도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없이는 만날 이유가 없다. 얼굴도 보지 말라”고 원내대표단 단속에 나섰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정 대표의 측근은 “협조할 것은 협조해 왔는데 여권이 번번이 뒤틀수를 때린 데 대한 배신감이 크다”고 말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지난 11일 밤 예산안 협상 도중 “사기당했다”며 협상을 뛰쳐나온 이후 “강렬하게 전사하겠다”며 강경투쟁의 선봉에 섰다.

두 사람은 민주당이 접거한 국회의장실과 상임위 사무실을 수시로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소속의원들에게도 전화를 걸어 “힘을 합하자”고 독려하고 있다.

다.

때문에 노선갈등 조짐이 보였던 당 내부는 단일대오를 유지하며 결속력을 다지는 모습이다. 푸념만 늘어놓던 당직자들의 분위기도 다잡아졌다.

‘MB악법’으로 규정한 광점법안 상당수가 당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필사적 저지투쟁을 통해 전통적 지지층을 복원하겠다는 포석도 깔려있다.

물론 ‘발목 잡기’로 비칠 수 있다 는 부담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두 대표의 머리에는 ‘지금 끌어들여 생각하면 영원히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더욱 팽배한 상황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 중점추진법안 선정 출속·부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원장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원장은 23일 “한나라당이 제시한 중점추진법안 131개 중 절반 가량이 한 달 사이에 뒤바뀌어졌다”면서 “이는 중점추진법안 선정 자체가 출속 부실이었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정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은 지난 10월30일 중점추진법안 131개를 발표한 뒤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지난 21

일에는 이 가운데 60여 개를 제외하고 새로 60여 개를 추가해 발표했다”며 “기존 중점추진법안과 새로 마련된 법안 사이에서 중복되는 법안은 49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언론관계법, 국가정보원법 등 각종 광점법안이 한나라당의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정부 입법을 하면 입법예고, 공청회를 거친 후 법제처 수정, 국무회의 통과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의원입법을 택했다”며 “한나라당과 정부가 민주

주의 절차를 거부하고, 민주당의 원들은 ‘청부입법’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날치기 상정에 대한 사과와 MB악법 등 여야 합의 없는 법률안에 대한 직권상정 제발방지법을 약속하지 않는 한 법안심사에 임할 수 없다”며 “한나라당이 마치 민주당과 물밀접촉이 있는 양 호도하는데 저를 포함한 누구도 물밀접성을 진행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이시종 의원 “수도권 규제완화 요건 강화 법안 발의”

민주당 이시종 의원은 23일 “정부가 국회 동의없이 임의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도권을 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 등 3개 권역으로 나누고 그에 따라 일부 행위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수정법 시행령의

골자를 모법(母法)에 반영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은 또 정부가 공장총량 등의 수도권 정비계획을 변경할 때 국회 해당 상임위의 동의를 받도록 했고 수도권 내에서는 신증설이 불가능한 공장 규모를 200㎡로, 정부의 심의·승인이 필요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규모도 300㎡로 각각 명문화

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수도권 규제를 쉽게 완화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있던 세부적인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론 수렴 없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이 무력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 44년 전통 • 광주지역 최다 합격자 배출 !!
• 본원출신 전국수석 (송은영님 평균 96.7점)

최강의 교수진!
저자직강!

주택관리사

“2009년 9월 시험 예상”

첫 진도 개강 1월 2일

광주고시학원

직장인을 위한 고용보험 환급과정

국비지원금 개강일정 매강 철판점

전남여고 맞은편 3층

전남여고 맞은편 3층